

22일 Market Index	
코스피 2763.51 (-31.95)	코스닥 809.96 (-31.95)
금리 (연이자율) 3.071 (-0.003)	환율 (원/달러) 1388.20 (+1.50)



## 尹 정부, '트럼프 2기' 대비 對美외교 '플랜B' 시급

### 美 바이든 사퇴 '대혼돈'

尹 정부, 바이든과 우호관계 유지  
트럼프 외교노선, 바이든과 달라  
워싱턴선언 등 한미동맹 '불안감'  
대통령실 "美와 긴밀 협력 지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미(對美) 외교에 '플랜 B'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22일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상황을 주시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느냐, 미국 민주당의 새로운 대선주자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미동맹이나 대북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개 성명을 통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면서 대선 후보 사퇴 발표를 전격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직후부터 바이든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단기간인 취임 11일만에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쓰인 탁상꽃말을 선물했고, 이는 윤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다.

그리고 지난해 4월에는 한미동맹을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한 '워싱턴선언'

을 채택했고, 이어 8월에는 한미일 간 협력 정신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맺었다. 올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워싱턴D.C.에서 만나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북러 군사협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기반' 한미동맹의 완성을 이뤘다고 자평한 바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로 현재까지 이룬 한미동맹의 성과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후보 교체를 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노선은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 노선과 사뭇 다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자'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는 'Pax Americana(팍스 아메리카나·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의 힘에 기대 세계 평화를 유지하려면 수혜받는 측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당시 우리나라를 향해 "한국은 부자나라"라며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증액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도 두 차례나 가졌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시각도 바이든 대통령과 다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감정과 잘 지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다시 만날 의향이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고, 신냉전 상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밖에서 한 여성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그간의 고마움을 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델라웨어주 사저에서 격리 중이던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을 107일 남기고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AP/뉴시스

황에서 미국 및 서방과 손을 잡는 '가치 외교'를 우선으로 한 윤석열 정부가 '2기 트럼프 행정부'를 대비해 다른 노선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대통령실은 긴장감 속에서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

통령의 후보직 사퇴에 대해 "타국의 국내 정치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며, 우리 정부는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서울 인구 감소분 전국의 64% 달해

현재의 서울, 부산, 대구 인구가 5년 전과 각각 같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지금까지도 전혀 감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이들 3개 도시의 인구 감소분 합계는 전국 감소분과 같았다.

21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가 내리막길로 접어들기 직전인 지난 2019년 11월 대비 올해 6월 기준 인구는 58만 명 줄어 들었다. 4년 7개월간 5185만 명에서 5127만 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 거주민 수는 973만 명에서 936만 명으로 -37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감소분의 63.7%에 달하는 수치다. 부산과 대구는 각각 -13만 명, -8만 명으로 올해 6월 인구가 328만 명과 236만 명으로 집계됐다.

경기지역 인구 44만 명 늘었지만 서울·부산·대구 감소 상쇄 역부족

경기 인구 감소 전환 시점부터 총인구 매우 가파르게 줄어들 듯

이들 3곳에서 도합 58만 명이 줄었고,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전체 감소분과 같다. 물론 17곳 중 대부분이 거주민 수 하향곡선을 그렸으나 경기 지역의 인구 증가가 전국 감소분을 그나마 줄였다. 해당기간 경기 인구가 44만 명 늘어났음에도 서울·부산·대구의 동반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또 인천과 세종, 충남, 제주에서 인구가 늘었지만 증가분은 경기와 달리,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 밖에 대전, 광주, 울산과 나머지 6개 도는 총인구 감소추세에 연동돼 있다.

서울은 그간 사실상 인구 감소를 견인했고, 과거 1000만 수도에서 800만 명대 진입을 향해 가고 있다. 통계청 등은 경기 인구가 감소로 돌아서는 시점부터 총인구도 매우 가파르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연구원은 통계청 자료 등을 인용해, 경기도 내 시·군 31곳 중 30곳이 오는 2067년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이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30대 여성인구의 5배, 위험 지역이란 2배 이상인 곳을 말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김병환 "금투세 폐지해야... 시장 교란 우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금투세 대상 투자금 150조 수준  
해외로 빠지면 韓시장 동력 잃어

"금융투자소득세는 부자감세가 아닌 투자자를 위한 감세다. 금투세는 자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등으로 얻은 이익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최고 27.5%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 금투세를 두고 여(與)당은 자금 이탈 방지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野)당은 부자를 위한 감세라며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금투세를 처음 도입했을 때와 시장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

세를 도입할 때에는 '소득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시돼 추진됐다"며 "당시에는 투자자가 600만명이었는데, 현재 1400만명으로 늘면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 수준이지만 이들의 투자금은 전체 시가총액의 6%가 넘는 150조원 수준이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이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단기투자성향이 강해지고 상당한 돈이 해외시장으로 빠지면서

한국주식은 상승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금액상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예정대로 시행되면) 주식시장 교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윤리 김 후보자는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금융구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내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리 기자 yul115@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4.5%... 총선 15주만에 30% 중반 진입 /사진 뉴시스  
▲ 체코 정부 원전사업에 '한수원' 선정... 윤 대통령, 원전생태계 강화

▲ 김건희 여사 '명품백·도이치' 조사는 란... 대통령실 "특혜 주장 과도"  
▲ 군, 북 오물풍선 500여개 식별... 대북 방송 이틀째 전면 시행



▲ 공군 11전비, 적 무인기 공격 대비 군·경·소방 합동훈련  
▲ 이 방위위원장 후보, 대전MBC서 급여 6억 받는 동안 영업익 90% 감소 /사진 뉴시스